

국정과제 보고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고별만찬으로 처음 기획된 자리입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치하 드리고 만찬이나 함께 하는 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욕심을 냈습니다. 우리가 일을 위해서 토론을 해왔지만 평가에 관해서는 같이 토론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일했지만, 자기 분야나 다른 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평가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게만 평가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이든 과이든 객관성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함께 참여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진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관적인 평가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 차이가 극복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다른 평가, 생각들을 들어보고 가급적이면 관점이나 기준에 있어 어느 정도 합치될 수 있는 그런 결론이나 평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돌이켜보고, 성과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대화 토론을 하고 그리고 고별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 앞으로 보지 않을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얼굴을 뵈니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 마무리 발언 요지

참여정부는 사실상 부처와 위원회가 함께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역사가 요구하는 과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역대 정부에서 미뤄둔 난제들을 정면으로 다뤄서 해결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앤다는데, 균형발전정책은 크게 후퇴할 것이 뻔합니다. 담당 조직을 강화하면 일이 잘 되고, 약화시키거나 없애면 잘 안 굴러가는 것이 관가의 법칙입니다. 균발위는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여러 부처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해왔고 시·도의 요구와 이해관계도 공정하게 수렴·조정해왔습니다.

위원회가 이해관계 충돌 조정함으로써 통합적 정책 가능

위원회 운영경비가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제도화해서 시민사회와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 오류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함으로써 통합적 정책이 나옵니다. 장관이 수퍼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개방적 민주적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의 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먼저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

니다. 분열과 지역주의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철학을 가지고 기회주의를 배격하는 ‘원칙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진보·보수의 가치 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근거 없는 이념공세 자인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

역사의 진보 관점에서 지난 20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87년 민주화 이후 각종 제도개혁과 투명성·합리성 등 그 성과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화세력으로서 야당으로서 그리고 집권세력으로서 해온 것입니다.

‘왜 100점짜리를 못하고 60점밖에 못했냐’고 나무란다면 정책환경과 스스로의 역량의 한계를 돌아볼 수 있겠으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식의 근거 없는 이념공세에 대해서 ‘반성하겠다’고 자인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공세에 대해서 깊이 따져보지 않고 인정하지 말고 객관적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람직한 대안과 이후의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 국정과제보고회 발제 요지

0 정치 분야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참여정부 정치개혁 성과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제왕적 1인 체제 종식과 시스템 정치’, ‘민주주의의 심화와 공고화’, ‘지역주의 정치

타과 노력’입니다. 미완의 정치개혁 과제로는 ‘지역주의 극복과 선거제도 개혁’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 ‘개헌과 책임정치 구현’입니다.

o 통일·외교·안보 분야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참여정부 5년의 성과로는 ‘북핵문제 : 비핵화 이행단계 진입’, 남북관계 :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평화협력 틀 마련’, ‘한미동맹 : ‘21세기형 동맹관계로 격상’, ‘자주국방 : 국방개혁과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정상외교 : 실용적 전방위 외교’, ‘위기관리 : 시스템에 의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북핵문제와 관련, 10.3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시 북핵해결 본격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불능화·신고 이행 여부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시기, 남북관계 진전 속도,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 등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남북간 합의 『기본틀』은 유지 될 것으로 보이나,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협력 범위와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경제분야 (이정우 경북대 교수)

참여정부 경제운용의 4대 특징은 ‘적극적 개혁·개방’, ‘동반성장·사회 통합’, ‘지역균형발전’, ‘장기주의(*단기적인 인위적 경기부양책 사용 자제)’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는 ‘개발주의 - 대운하 공약, 수도권 규제 완화’ ‘시장만능주의 - 작은 정부론, 금산분리 완화’ ‘단기 실적주의 - 인위적인 경기부양’ ‘인기영합주의 - 감세, 정부조직 개편’

등 4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o 지역균형발전 분야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참여정부 지역균형 발전 추진 성과로, '04~ '07간 23.2조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투입(*연평균증가율 : 10.8%)하고, 정부 R&D 예산의 지방투자 비중을 확대(*2003년 27.0%→2007년 39.8%)하였습니다. 양적측면에서는 ' 지방의 GRDP 및 수출 비중 증가 ', ' 누리사업 참여대학 학생 취업률 상승 ', ' 지역전략산업 성장률 증가 '이며, 질적 측면에서는 ' 성공사례 및 성장산업의 가시화 ', ' 산학연 공동체 활성화 ', ' 지역의 자신감 배양과 지역혁신정책 공감대 확산 '입니다.

향후 인재-기술-산업이 융합된 행복도시·혁신도시가 완공되는 2012년 이후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능하여 다극분산형 국토 형성 가속화될 것이며, 지방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작동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